

특정 업체 독무대 된 전북도 상설공연

최은희 의원, 문화관광재단 행감서 질타... “무대세트·무대의상 타 지역 업체, 하드웨어 렌탈 도내 S업체 편중”

전북도 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상설공연이 특정 업체와 계약 편중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14일 열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약 편중현상은 세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우선 무대세트 제작의 경우 최근 3년 간 총 10건(3억4,540만원)의 계약 중 타 지역의 S업체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

건(2억9,640만원)의 계약을 독차지했다. 무대 의상 분야는 최근 3년간 총 6건(2억8,550만원)의 계약을 발주했지만 모두 타 지역의 M업체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음향 등 공연 하드웨어 렌탈은 두 개의 상설공연이 올해부터 재단으로 이관되기 이전,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에서 주관할 당시부터 도내 S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했다.



최은희 의원

특히 해당 업체는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하드웨어 렌탈도 최근 6년간 두 번을 빼고 모두 납품을 해왔다. 액수로는 16억800만원에 달했다.

계약방식은 무대세트와 무대 의상의 경우 계약금액에 따라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됐지만 결과적으로 납품 업체는 항상 동일했다. 공연 하드웨어 렌탈은 개별 추정가격이 1억을 상회하기 때문에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이병천 재단 대표는 “조명 음향 렌탈은 도내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규모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

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타 업체가 납품한 실적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복수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이 대표 해명은 공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연예술 관련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업체가 독식을 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고, 지역 내에 무대 의상 제작 업체가 없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인력 양성을 통해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의 자본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민주당 “한민구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가시명을 한 데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또는 탄핵소추 의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협정 체결을 기필코 막겠다”며 반발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일방통행식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과 국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제 국방부의 독선과 독단으로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한국 국군의 군사기밀을 고스란히 내주게 생겼다”며 “도대체 이런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백번을 생각해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던 장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국정이 파탄 나서 국민에게 퇴출명령까지 받은 정부가 이런 중대한 협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뉴스시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야당 의원들

강신명·구은수 위증혐의 고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14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백남기 농민 청문회 당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남춘·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이상 민주당)·권은희·이용호·장정숙(이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백남기 농민 부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고 거짓 증언한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부상 인지시점을 2시 이후라고 증언했으나 이들에게 2시에 보고된 상황 속보에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실이 적시돼 위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경질이 기간 청문회 등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부상 인지 시점을 2시 이후라고 주장한 것은 구조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것이 거짓 진술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황 속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누락해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하자 오늘로 꼭 1년이 됐음에도 국가 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지금까지도 특검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안행위원들은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그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을 고발했다.

당초 이들은 이철성 형 경찰청장도 백남기 씨 관련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 했지만 청문회가 아닌 상임위에서 나온 발언인 탓에 고발하지 못했다.

/뉴스시스

이정현, 버티기 안간힘... 새누리 초·재선과 릴레이 회동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당내 초·재선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자신의 즉각적인 퇴진요구를 거두어 줄 것을 연신 읊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이 많은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접해 어느 누구보다 마음 고생이 많고, 상처도 많은 리라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떠나 당 대표로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물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대를 의결했다”며 “지금 상태에서 정답이 어디 있겠느냐. 당의

단합과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고 큰 정치 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께서 많은 협조와 양해, 양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국내각 구성과 관계없이 늦어도 12월 20일에는 사퇴하겠다는 구체적인 퇴진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헌당규를 검토해 실무자들이 날짜를 결정했다. 12월20일보다 먼저 사퇴하는 방안도 있다”며 “국정이 안정되는 중립 내각이 출범한다면 12월20일 전에도 바로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재선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당의 해산을 위해 조기 전대 등 모든

것을 열어놔야 부족하다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모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 함께 지혜를 모으자는 총론에는 공감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든 합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덕홍 의원은 “우리가 화합하면서 한 몸으로 가야한다. 지금 여러가지 엄중한 시기에 서로 힘을 합하자. 그것이 제일로 추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자신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찾아가다 “박근혜 키즈” 출신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뉴스시스

새누리 비박계, 친박계 지도부와 판살림 본격화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두집살림’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비박계는 14일 친박 이정현 지도부’를 대신할 비상시국위원회 준비모임을 갖고 판살림 처리기에 본격 나섰다.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환경연구원 조직관련 책임 문제를 들며 전북도의회 감사를 중지하고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 산하기관인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인사와 관련된 불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인사 교류가 외부와 단절된 연구원의 특성상 한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상사 임금이 인사에 크게 작용해 직원들 쫓겨가고 눈치 보기가 민연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

서 비상시국위 준비모임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지도급 인사와 시도지사 등을 포함하는 대표자 회의 형태로 비상시국위원회 구성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본 사안은 개인에 대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난감해 했다.

이 의원은 “인사관행을 가진 연구원이 이 사안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부터가 크나큰 문제”라며 “연구원 직원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이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연구원을 비취려면 연구원 인사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이성일 의원

도의회 환복위 해감 이성일 의원, 김일재 행정부지사 출석 요구... “상사 임김 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내부 인사 불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4일 새만금 추진지원단과 보건환경연구원,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일 의원(군산4)은 전북

논의하며, 오는 16일 대표자 회의와 실무회의를 포함한 회의를 연 뒤 결정안을 오는 18일 비상시국위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을 상대로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는 현 지도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당내에서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경남도 지리산댐 건설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전북도당 “환경파괴·농업 피해 커”

경남도가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철회’를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지리산댐 건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의 시민단체와 지리산권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제성도 없는 식수용 지리산댐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라며 “홍수조절기능도 없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논란을 계속 만들어 지리산권역 주민들을 기간질시키는 일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파괴와 농업피해, 유·무형문화재 손실 위험이 큰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한다”라며 “국토부와 경남도가 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남도는 정부가 실효성 없어 반려한 지리산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독단을 버리고 반대하는 지리산권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댐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맑은 물을 경남도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뉴스시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위원 9명 임명

심판위원장에 송기도 전북대 교수

부심판위원장에 이상지 전 의원

양오봉 전북대·이재운 전주대 교수 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윤리심판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명된 윤리심판원은 외부인사 6명과 당적을 가진 내부인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심판위원장은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부심판위원장은 양오봉 전북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이재운 전주대 교수·이상지 전주를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임광현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황현 도의회 의장·신종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안명수 도당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해당 시·도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뉴스시스

박 대통령 검찰조사 16일 이후로 미룰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제시한 시점인 15~16일보다 실제 조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뉴스시와의 통화에서 “변호인 선임까지 시간이 걸리고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여러 준비사항을 감안할 때 16일까지는 조사가 응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유증로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조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는 검찰 조사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15일은 해야 임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에 민표된다는 점을 감안, 19일까지 최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진술을 최씨 공소장에 반영하려면 15~16일 중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연기될 경우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한 비박이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탄핵소추의 명분이 될 것이라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편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법률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 2014년 이른바 “정문화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 소송을 대리한 바 있는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오명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홍경식 전 민정수석과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 출신이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이명재 민정특보가 변호인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사 방식은 검찰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방문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부르는 소환조사의 경우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만일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게 된다. 다만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청와대까지 직접 찾아가는 모양새가 국민 여론상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 주변 안개(안전거둑)나 대통령경호실 체력단련장이 있는 연무관 등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15일 열리기로 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영수회담은 불발됐다.

/뉴스시스